

미지급 중간정산(중도인출)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

- (검토배경)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(중도인출)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*

* 행정해석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기산하나,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중간정산일부터 기산

-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(퇴직일로부터 3년 미경과)에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중간정산의 오지급을 다투는 경우,
 - 법원은 소멸시효 도과로 판단하여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
- 이에,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행정해석 변경

- (변경사항)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

- (행정사항)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미지급 중간정산(중도인출) 퇴직급여에 대한 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본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고, 체불 퇴직급여액 산정

*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도과 시 체불 퇴직급여액에 미포함

-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사업장(IRP 특례 및 병행형 포함) 및 중도인출 신청자에게 미지급 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사항을 안내

*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18조) 및 가입자 교육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32조제2항)을 활용하여 가입자별 안내

□ 행정해석(변경 전)

- (질의)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, 퇴직금 재산정 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 방법
- (회시)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,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
(근로복지과-2951, 2012.8.28.)

□ 관련 판례

— < 관련 판례 > —

-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 되고,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.
[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3다54322,54339 판결]
-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
[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20542 판결]
- 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’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,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.
[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1다77290 판결]